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완화 재고되어야 한다

1. 환경규제완화와 환경행정규제 완화의 차이

새정 부 출범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낭비 요인과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능률적인 제반요소를 줄이면서 기업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단 다른 부처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면에서도 대찬성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않나 하는 느낌도 갖고 있다.

완화내용을 보면 배출시설설치 허가 기간 단축이라든가 허가대상 조정, 사전 허가제개선,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기록부작성 의무규정 삭제, 환경기술감리제도폐지, 부과금 부과방법 개선 등 실제 환경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환경행정규제 완화가 곧 환경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당초 계획 입안의 의지와는 달리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류이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오염물질이 유발되는 환경 기준



이문원
(서울협의회 회장)

은 더욱 강화되는데 비해 이와 상반되게 행정적인 불합리한 요소는 완화하는, 즉 두가지를 같이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환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행정적인 자극(?)을 받지 않고 규제가 느슨해진다고 하면 기업주는 물론이고 환경관리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하는 노파심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직업관을 갖고 있는 환경 관리인들은 없겠지만 혹시 오산을 불려일으키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2. 환경관리인 등 법정의무고용 제도의 완화는 환경행정의퇴보

정부에서는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 시도의 환경기구 확대와 환경기술공무원의 수는 3~5배 늘리는 상태에서 산업체 오염물질 전체의 95%를 배출하는 1, 2, 3종 업체의 현장환경관리인중 2종 사업장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1급 이상 자격자에서 2급 이상 자격자로 조정한다고 한다. 이는 기술적인 기업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완화하여 인건비를 줄인다는 발상은 환경행정규제 완화를 범미로 전문가들을 사장시키고 수질 및 대기의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를 가볍게 다루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작은 것을 취하려다 더 큰 것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듈다. 환경기술인력이 줄어들면 그동안 축적된 기업체 내의 환경기술이 실종되고 국가의 환경,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지금 보다 더 나빠지고 퇴보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환경 기술인력은 기술자격자인 수질, 대기, 소음진동 기사가 45,000명이 있으며 전국 65개 대학

에서 환경학과 졸업생이 매년 3,500여명씩 배출된다.

92년 4월 통계로 보면 배출업소 26,085업체 중 환경기사 유자격자로 배출시설 1, 2, 3종에 근무하는 관리인은 14,841명으로 1/3만이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전부, 소연재, 관리인들이 왜?

요즈음 생산 기업체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환경문제를 외면하거나 축소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결국 환경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 의식의 완수 등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며 굳이 세계적인 추세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기업발전과 도전의 기회로 삼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돋는 방법으로 환경관계 Utility의 세제 금융 혜택, 환경오염방지시설비의 적극적인 용자, 기술보급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돋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환경개선의지와 관청의 지도 능력이 고차원화되어야 하고 산업체는 이윤추구에 만금급하여서는 안되며 관리인들도 기술축적 등 실력배양을 하도록 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4. 결언

환경이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개혁에서부터 국민들의 자각, 정부정책의 확실한 의지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엄격한 환경기준의 적용, 환경기술의 고도화, 생산공정전체의 오염물질저감 대책 등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행정기준 완화로 둔갑하지 않아야 될 것과 대기업의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유능한 관리인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공연히 작은 것을 취하여 더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도 안되고 환경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쉬어가지도 말고 피해가지도 말아야하며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환경관리인의 지위를
강화하여 인건비를
줄인다는 방침은
환경현대화제 완화를
별미로 전문가들을
사장시키고 수질 및 대기의
오염물질 저감 배출업소를
기획자 대로는 찾으려
간식할 수 밖에 없다.
환경기술인력이 줄어들면
그동안 확장된 기업체 내의
환경기술이 실종되고
국가의 환경,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빠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발언대’는 건강한 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발언대’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